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8.(월) 17:00  
(지면) 2026. 5. 19.(화) 조간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 개최
-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 >> 24시간 재난대응 처우개선부터 당직 개편까지, 20개 핵심 안건 논의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되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통로이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4개), 복무·수당(8개), 예산(3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담긴 총 20개의 안건을 건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교육 의무화 및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도 함께 논의된다.

>> ‘통합정원활용제 폐지’ 등 2025년 10건 수용 성과, 올해도 개선 이어

한편, 2025년도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 안건이 논의되어,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되었으며,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의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강조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공무원단체과	책임자	과 장	정명호 (044-205-3281)
		담당자	사무관	노경성 (044-205-3282)



## □ 추진 배경

- 전공노가 합법화('18.3.)됨에 따라 정책현안에 대해 소통 채널 운영 필요
-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 복무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구성하여 매년 운영

## □ 정책협의체 개요

- (성격)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요건 없음
  - ※ 지자체 공무원제도 등 노조 건의사항을 검토·논의하여 최종 합의 도출
- (구성) 행안부차관(주재),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대표 등 20명 이내
  -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공무원단체과장, 주요안건 소관 과장
  - 노 조 10명 이내(공노총, 공무원연맹, 전공노 등 각 3~4명)
- (운영) '18년 이후 매년 연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수시 회의 개최
- (주요 내용)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 건의 및 제도개선

## □ 연간 계획

- 정책협의체 운영·개선방안 협의 및 안건발굴(1~3월)
-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4월)
- 안건 분야별·부서별 제도개선 업무협의(5~11월)
-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12월)